

다산포럼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전국에서 의대 정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어디일까? 서울대. 그렇다면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연·고대. 이어가기 썩슬한 농담이지만 거의 사실이 된 듯하다. 올해도 여지없이 장기결석 학생들 중의 일부가 수능이 끝난 뒤 기말고사 시간에 나와 명한 표정으로 백지 답안지를 냈다.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결석자에게는 학적상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면, 잠깐 눈동자만 흔들릴 뿐 명한 표정에는 변화가 없다. 대부분 휴학 없는 반수에 실패한 학생들이다. F학점이 없었던 해도 좌절감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닐 것이며, 지금 머릿속에는 내년에 기필코 성공하겠다는 생각뿐이라.

올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불수능으로 불리고 있다. 길러문항을 없애려는 대통령의 지시와 상위권 변별력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이 결핍하여, 몇 개의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는 대신 고난도 문제를 대거 출제한 것이다. 불수능의 원점수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점자가 모두 서울 강남 유명 입시학원 출신의 재수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원 인근 전설값마저 폭등하고 있다는 보도가

반수와 N수

이어지고, 길러문항과 더불어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했던 대통령의 지시를 조종하면서 입시 컨설팅 업체들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원점수 만점자가 표준점수로 전환하면 왜 최고점자가 되지 않는지, 수사에서 합격권에 들었던 학생이 불수능을 만나면 왜 불합격되는 것인지, 왜 지원하는 대학마다 다른 입시 전략을 짜야 하는지, 길러문항이나 불수능 혹은 불수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 복잡해서 학생과 그 양육자들은 대입 제도의 속성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다. 최상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입시학원과 컨설팅 업체에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불안과 공포를 다스리는 비법 약제를 사교육 시장에서 구매하는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입은 예전부터 남은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이슈로 대접받아 왔다. 그러나 태풍의 눈처럼 다른 노력 변수들을 거의 다 빨아들이게까지 된 것은 최근의 현상이다. 결과는 사교육 시장의 최대 성장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최근 설문에서 세계 최저 출생률의 원인으로 국민들이 지목했다는 '자녀 양육과 교육 부담'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서울 대치동에 거주하면서 유명 입시강사의 수업을 듣게 하고 유명 입시 컨설턴트와 상담을 여유 있게 받을 정도의 수입이 아니라면, 내 자녀가 소위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내 자녀도 나처럼 이 지옥 같은 노동환경에서 평생을 허덕여야 할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라면 아예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녀가 지옥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 된다고들 결정했는 것이다. 여유 있는 수입이 보장

된 부모들은 내 자식이 소위 좋은 대학에 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어지간한 위치를 점유해도 까딱 잘못하면 저 지옥 같은 노동환경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낭떠러지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알려진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대학으로 보내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첫해에 못 보내면 사교육비에 세월까지 얹어서 지출한다. 재수, 삼수, N수를 시켜서라도 보내려고 하는 그곳은 서울대의 대이다. 다시 퀴즈. 서울대의 대에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다른 대학 의대라고 한다.

이 시로의 대입 제도와 복대전 같은 사교육 시장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모두 서울대의 대를 정점으로 하는 도도한 한줄 세우기 강물의 하구 삼각주이다. 삼각주에 폭탄을 터뜨려야 거대한 강물에 휩쓸려오는 퇴적물은 계속 쌓여만 갈 것이고, 울해처럼 혼란의 아비규환만 야기할 것이다. 이 탁한 퇴적물은 투명한 상류의 지옥 같은 노동환경에서 흘러내려온 것들이다. 여성, 소기업, 비정규직, 일용직, 생산직 등등에 대한 투명한 차별과 취직을 모두가 지켜보고 겪었으니, 다들 한줄 세우기의 정점을 향해 도도하게 달려가는 것이 개인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입장에서의 합리적 선택들이 결국 공동체의 소멸을 불러온다. 공동체는 새로운 전망을 갖고 이 물결을 돌려놓을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개인적 합리성과 공동체의 합리성이 일치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물결이 막혀 강물이 다 썩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社說

진전 이론 공항 이전, 무안군 설득에 달렸다

답보 상태를 보이던 광주 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만남으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제 나주 혁신도시에서 회담을 갖고 5개 항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의 핵심은 광주 공항 이전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사·도가 협의해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광주 민간공항을 2025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고 시기를 못박은 것은 진일보한 내용이다. 광주 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한다는 것도 사·도 지사의 이번 만남에서 이끌어낸 성과다. 그동안 광주시는 공항은 한평,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분리 이전안을 제시한 반면 전남도는 무안으로 통합 이전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

광주시의 양보로 무안으로 통합 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후보지 논란

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그렇다고 불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이란 전제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광주시는 언제든지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 의미있는 진전이란 결국 무안군이 군공항을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합의안 2항에 있듯이 사·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민선 8기 들어 무안군은 주민 의견을 내세워 공항 이전을 반대하며 협상장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선 7기때는 사·도 지사와의 협상장에 나온 적이 있다. 사·도 지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무안군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소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무안 발전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합의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짓길 바란다.

광주·전남 고독사 예방시스템 재점검해야

광주·전남지역에서 주변과 단절된 채 살다 홀로 임종하는 고독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엇그제 광주시 북구 한 주택에서 A(70)씨가 홀로 숨진지 10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웃은 물론 자식과도 왕래 없이 홀로 지내다 죽음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시에서는 B(61)씨가 폐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미혼인 B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복지지원 대상자도 아니었고 폐가 인근 일반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었다. B씨의 죽음은 집도방이 홀로 숨져 있는 B씨 옆에서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함으로써 뒤늦게 드러났다. B씨의 어머니와 형제가 타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를 찾는 실종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아 복지정책 대상자가 아님에도 홀로 숨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군으로 고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고 있는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정책이 사각지대에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유형 고독사는 가족단절, 비혼, 황혼 이혼, 1인 가구 증가 등 복합적 이유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지역 1인 가구는 2018년 17만 4614가구였지만 지난해에는 22만 1464가구로 4년새 5만 여가구가 늘었다. 전남 역시 2018년 23만 5062가구에서 지난해 28만 3429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당국은 고독사가 특정 계층, 연령층을 떠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 점검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자발적인 고립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만큼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기 계층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NGO칼럼

‘청개구리’ 환경부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지난 7일 환경부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신구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론을 본격 선언한 셈이다. 내년 치수 예산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 2조원을 마련할 방침이라 하니,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할 만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R&D, 노동, 여성, 청소년, 사회적경제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바 있어 치수사업의 예산 증액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으로 홍수방입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 확대,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과연 신규 댐을 건설하고, 하천 준설 우선 정책이 타당할까.

대형 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기능은 바로 '생태계 파괴'이다. 댐이 없는 강은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양한 자연 서식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댐은 어류와 다른 강가에 사는 종들의 이동과 물의 흐름을 저해하고 강물의 온도와 화학적 조성을 바꾼다. 침식과 퇴적 등과 같은 지질학적 과정을 방해하기도 한다. 퇴적물은 댐의 후방에 갇혀 있어 강 하구로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안에서는 침식이 더욱 가속화된다. 심

각한 것은 이러한 서식지 변화는 민물 어류 종의 멸종을 초래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한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구 소련의 주요 강들의 5분의 4가 댐에 의해 유속이 변화되거나 강 줄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두 번째 심각한 역기능은 바로 '수질오염' 문제이다. 물의 흐름을 막으면 썩게 되는 것은 상식이다. 퇴적물 이동의 인위적인 방해는 유기물이 함유된 토양을 축적시켜 수질을 악화시킨다. 물의 자정능력을 방해한다. 영주담의 녹조, 안동담의 중금속 퇴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댐이 저장하고 있는 물로 인하여 안개 발생이 잦고, 댐 하부에서 낮은 온도의 물이 근처의 공기를 냉각시킴으로써 농작물에 피해를 입기도 한다.

댐은 또한 붕괴 가능성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설사 댐이 붕괴되지 않더라도 배수 타이밍 때문에 홍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0년 섬진강 범람의 원인을 여기서 찾기도 한다. 홍수 조절을 위해 만들어진 댐은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제공하고 하류 범람지대에서의 정착을 유발하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피해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댐은 기후위기의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지난 8월 감사원은 전국 생활·농업·공업 용수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 포항의 냉천이 범람한 이유가 상류가 댐이 없어서라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4대강처럼 물을 대규모로 가두는 치수책으로는 기후위기를 버텨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4대강 보의 홍수 대비 효과가 없다는 것도 명백하다.

2022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황폐화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을 제안했다. 자연복원법이라는 법안 명칭은 단순히 습지 등의 생태계 복원 사업만을 다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영역에서 담대한 목표를 담고 있다.

자연복원법은 2030년까지 EU 국가의 육지와 바다의 최소 3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복구할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도시 공간의 녹지 손실률 50%, 하천의 연결성을 방해하는 보나 댐을 철거하여 2030년까지 2만5000km의 강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자연 친화형 강, 하천 정책이 극한의 집중호우와 가뭄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댐은 여러 당사자들의 삶과 생태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신규 댐을 건설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막상 대상지를 사회적 파장 때문에 못 밝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 이번 정부들어 잇따라 발생한 치수 실패가 댐이 없어서라는 잘못된 진단부터 되짚어보길 바란다.

정부는 댐 건설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최근 집중호우 인명피해는 산사태나 하천 급류에 휩쓸려서 발생한 것이다. 댐이나 하천 준설로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결을 같이 한다. 환경부는 청개구리가 되지 말고 국민의 말을 잘 듣는 자연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란다.

기고

산림부국(山林富國)을 꿈꾸며



**박영길**  
산림청 순천 국유림관리소장

1991년 9월 강원도 정선에서 첫 발령을 받아 산림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산림보호 순찰이나 국유림 경영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주로 활용해 산간오지의 주민들을 만나고 산림사업 현장을 누볐다. 벌써 32년이 흘러 그 익숙했던 오토바이는 이제는 낯설어졌고 자동차로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국유림 보호와 경영 등 산림청 업무의 최전선에서 근무해 왔다.

입사 전부터 산에는 울창한 숲으로 녹음이 우거지고 아래에는 맑은 강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휴양을 즐기는 모습을 꿈꿔 왔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나무를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산림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산림공무원을 시작해 32년이 넘는 동안 원했던 데로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수천 ha의 숲 가꾸기도 했다. 밤새도록 산불 진화도 수도 없이 했고, 산림 병해충을 방제하고 사방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토목 공사도 많이 했다.

순천 국유림관리소장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게 된 것도 대단한 행운이었다. 순천에 근무하면서 내가 꿈꿔왔던 아름다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원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즐거워하고, 강에서 배를 타고 휴양을 즐기는 모습을 봤다.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그 꿈을 이루어준 것 같아 행복하다.

3월 31일은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막식날이었다. 산림청과 전남남도, 순천시가 공동 주최한 개막식에 대통령 참석과 산림청장 초도 순시가 겹치게 되었다. 하필 이날 산불이 났다. 점심도 굶고 산불을 진화했다. 다행스럽게 큰 산불이 아니어서 빨리 진화할 수 있었고 산림청장 초도순시도 잘 마무리되고, 정원박람회 개막식도 차질없이 진행됐다.

올해 전남에서 사상 초유의 대형 산불이 4건(합평 1건, 순천 3건) 발생했다. 그 중 밤을 새우며 산불진화 활동에 직접 참여한 건 순천에서의 3건이었다. 순천 월등(3월 3일, 47ha)과 별랑(3월 18일, 16ha), 송광(4월 3일, 188ha) 모두 순천시장을 보좌하는 공동보좌관으로 참여해 산불진화 지휘본부를 운영하면서 대형 산불임에도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없이 진화를 마무리한 것은 정말 보람있는 일이었다.

그중에서도 순천 별랑 산불 진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산불 현장에 도착해보니 직각적으로 큰 사고가 날 것 같았다. 위쪽으로는 종우(種牛) 목장에 한 마리에 2억원을 호가하는 소가 200여 마리나 있었다. 아래쪽으로는 30여 호의 민가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대피를

서두르고 있었다. 또한 가운데로는 거대한 고압 송전선이 지나고 있었다. 송전선 때문에 헬기 작업도 쉽지 않고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어서 지상 진화도 쉽지 않았다. 다행히 임도가 있어 진화 차는 접근할 수 있었다. 중간에 산불을 진화하지 못하고 야간 산불로 변했다. 밤새 산불 특수진화대를 동원해 물을 뿌렸다. 아무런 힘들어도 야간에 지상 진화대가 물을 최대한 뿌려 산불 확산을 막지 못하면 다음날 헬기가 많아도 확산된 산불로 발생한 연기 때문에 헬기가 이륙을 못하기 때문이다. 쉬지 않고 물을 공급해 준 소방차도 큰 도움을 줬다. 야간진화 작업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일출과 동시에 헬기가 이륙해 진화작업에 착수했고 산불은 잡혔다. 바로 뒷불 진화 및 감시체제로 바꾸어 다음날 아무런 사고 없이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나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임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산림재해에 있어서 임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임도를 만들되 어떻게 하면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안전한 임도를 만들 것인가 하는 품질 제고의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년 대형화 되는 산불과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확산 방지에는 많은 국민들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의 동참으로 울창한 산림에 모두가 즐겨위하는 산림부국(山林富國)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無等鼓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개인적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 10개비를 넘게 피우면서부터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랐던 것 같다.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헛구역질이 났던 '졸담배'의 기억이 새삼 떠오른 건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했다는 외신 보도를 접한 이후다.

WHO는 이를 위해 비백 머시 미국의 무총감과 아프리카연합(AU) 청년특사 인 치도 음렘바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 국제위원회도 출범시켰다. '미국의 국가주치의' 로 불리는 비백 머시의 무총감은 앞서 '외로움'은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었다. 그는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이 비만이나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19~34세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첫 조사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스스로 참여한 응답자 중 고립·은둔 위험에 처한 1만 2105명을 추린 뒤 심

층조사(8874명 응답)한 결과다. 삶의 만족도가 전체 청년 평균(6.7점)의 절반 수준인 3.7점에 머물렀고 2명 가운데 1명 꼴로 신체건강(45.1%)과 정신건강(63.7%)에 문제가 있었다.

청년들만 해당될까. 전남도가 지난해 실시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서는 모두 243명이 스스로를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이하(21.5%) 뿐 아니라 40대(22.6%), 50대(37%), 60~64세(18.9%) 등도 많았다. 전남도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가칭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플랫폼'을 내년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시작으로 4개 영역, 34개 중점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쉬운 건 전남도의 재정 형편을 이유로 담당부서가 올린 예산(8800만 원)의 절반만 반영됐다는 것이다. 제대로 사업이 될까 걱정도 앞선다. 은둔·고립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말보다 실천이 중요할 때다.

/김지를 기자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실장 <b>張必洙</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